

근현대 한국 통사서에서의 ‘빈곤’ 인식*

— 전근대사 서술을 중심으로

임 다 은**

[초 록]

사회문제로서 ‘빈곤’은 근대사회에서 발견된 담론적 구성물이다.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통치방식의 변화,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정치이데올로기의 발달은 ‘빈곤’을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제기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이에 따라 역사서술에서는 과거의 ‘빈곤’에 대한 인식과 재현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며, 통사서의 발간은 이러한 변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개항기 이후 한국에서도 근대적 형식과 내용을 갖춘 통사서가 발간되지만, 전근대 사서들을 주된 사료로 활용하면서 ‘빈곤’에 대한 유교적 인식은 상당 기간 통사서에 반영된다. 그러한 가운데 ‘빈곤’ 인식의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과정

주제어: 빈곤, 사회문제, 사회정책, 사회제도, 통사, 근대 역사학, 유물사학, 내재적 발전론, 민중사학

Poverty, Social Problem, Social Policy, Social Institution, Linear History, Modern History, Historical Materialism, Internal Development Theory, History of Minjung

근대적 지평을 연 첫 계기는 유물사학으로, 백남운은 사회구조적 문제로서 계급의 발생을 빈곤의 근본 원인으로 제기하고, 사회구성체의 이행을 통한 대중적 빈곤의 해소를 전망하며 빈곤 문제를 적극적으로 통사서에 가져왔다.

그러나 해방·분단을 거치며 남한에서는 유물사학의 관점은 단절되었고, 이기백에 의해 전근대 시기의 사회제도인 신분제와 부세제로부터 비롯된 문제로서 ‘빈곤’을 인식하는 관점이 제기된다. 여기에서 ‘빈곤’은 교육, 직업, 지식, 경제활동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사회적 신분을 구성하는 표지로 인식된다. 한편, 일제 식민지기를 거치며 ‘빈곤’과 사회 발전을 상충된 것으로 인식하고, 조선 후기 빈곤의 심화가 조선의 자주적 근대이행을 불가능하게 했다는 서사가 일반화된다. 1960년대 내재적 발전론에 바탕을 둔 연구경향은 이러한 관점을 비판하며 서술의 초점을 ‘빈곤’에서 ‘분화’와 ‘발전’으로 옮김으로써 빈곤 서술을 축소한다.

1980년대 이후 민중사학은 일제 식민지기 유물사학의 계승을 표방하고 내재적 발전론을 통해 형성된 역사적 지식을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이들은 빈곤의 원인으로 계급의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제도의 문제로서의 빈곤 인식을 비판하면서도, 계급에 대한 사회제도의 상대적 자율성을 인정함으로써 학계에 축적된 구체적인 연구성과들을 끌어안는다. 또한 조선 후기의 ‘대중적 빈곤’을 역사주체로서 ‘민중’이 형성되는 객관적 조건으로 제시하여 발전서사 속에 ‘빈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었다.

1. 들어가며

사회문제로서 ‘빈곤’은 근대사회에서 ‘발견’된 담론적 구성물이다. 근대 이후 산업화에 따른 생산력 폭발과 부의 집중, 산업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급격한 도시 유입과 도시빈민의 발생은 일차적으로 빈곤을 사람들의 눈앞에 가시화하였다. 또한 통계를 통해 파악되는 ‘사회’에 대한 새로운 삶의 성립, 빈곤과 치안유지에 대한 관심의 결합은 인식론적인 차원

에서 ‘빈곤’을 사회제도 및 구조의 결함이나 모순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즉 ‘사회문제’로 지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¹⁾ 또 다른 계기는 정치에 대한 근대적 사유로서 자유와 평등, 그리고 해방에 대한 관념이 등장한 것이다.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전제, 예측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한 정치적 주체의 탄생이라는 관념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자유·평등의 장애물이자 극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였다.

‘빈곤’에 대한 근대적 인식으로의 전환은 역사서술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개별적인 경험과 체험의 영역에서 역사적으로 실재했을 과거의 ‘빈곤’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파악하고 서술하는 인식론적 토대의 변화로 인해 ‘빈곤’이 역사에서 다루지는 방식이 변화한 것이다. 이는 단지 자료의 양적 확장이나 개별연구의 축적을 통해 과거에 실재했던 ‘빈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의 사실들을 재구성하고 종합하는 역사재현의 문제에 해당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역사서술에 나타난 ‘빈곤’에 대한 인식론적 변화를, 근·현대에 발간된 통사서의 전근대사 서술을 중심으로 다룬다. 각 시기별로 발간된 통사서에는 당대에 축적된 연구성과와 역사인식이 집약되고, 역사학의 학문적 성과물을 대중적으로 풀어낸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개별 주제가 역사재현의 차원에서 변화하는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좋은 매개가 된다. 특히 본고에서는 ‘빈곤’에 대한 근대적 인식으로의 전환을 추적하기 위해 전근대시기에 대한 서술 변화에 집중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해명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빈곤’이 사회문제로서 발견되고 근대적 역사서술에 등장하는 계기를 발견하는 것이다. 빈곤 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존재했지만, 사회문제로서 빈

1) 다나카 다쿠지(2006), 『빈곤과 공화국—사회적 연대의 탄생』, 문학동네, pp. 75-81; 조경희, (2016), 「1920년대 식민지조선 사회사업의 성격과 그 한계 — ‘방빈(防貧)’의 좌절에서 노동사업으로」, 『역사와 담론』 80, 호서사학회, pp. 98-99.

곤에 대한 인식은 근대의 특정한 인식지평을 반영한다. 적어도 1920년대 이후에 사회적 담론의 차원에서는 ‘빈곤’이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점이 역사서술에 등장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특히 백남운의 『조선사회경제사』(1933)와 이기백의 『국사신론』(1961)에 주목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통사서들을 크게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할 것이다. 먼저 사서들에서 제기하는 빈곤 문제의 원인을 살펴본다. 여기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원인과 직접적이고 정세적인 원인이 존재하는데, 본고에서는 후자보다는 전자에 초점을 맞춰 해당 역사서가 ‘빈곤’ 문제 일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살필 것이다. 둘째로는 빈곤 문제의 극복주체와 방향을 포괄하는 극복방안을 살펴본다. 전근대시기에 빈곤 문제에 일차적으로 대응하는 주체는 국가이기에, 각 사서들은 빈곤에 대응하는 국가의 행위에 대해 나름의 역사적 평가를 내린다. 그리고 만일 국가의 행위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 미진하다고 생각된다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주체와 방향을 다른 방식으로 제시하게 된다. 빈곤 발생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진단, 전근대 국가의 행위에 대한 평가는 통사서에서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인식하는 계기와 방법을 발견하기 위해 핵심적인 분석 대상이다.

두 번째 목표는 근대 역사학의 ‘발전’ 서사 속에서 ‘빈곤’이 배치되는 방식을 드러냄으로써, 사서 전반의 체계와 역사상 속에서 ‘빈곤’의 위상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다. 통사서는 국가·민족·민중을 단위로 하여 역사를 발전적이고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한다는 근대 역사학의 ‘역사’ 개념에 토대를 두고 기획되고 서술된 것으로, 인과관계에 따라 사건들을 배열하고 사회의 발전상을 구성한다는 특징이 있다.²⁾ 여기에서 근대로

2) 근대역사학의 특징에 대해서는 도면희(2009), 「국사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 한국 근대역사학의 창출과 통사체계의 확립」, 도면희·윤해동 편, 『역사학의 세기 — 20세기 한국과 일본의 역사학』, 휴머니스트, pp. 177-178 참고.

의 지향을 내포한 ‘발전’이라는 테마는 근대 역사학의 심층을 구성하며, 통사서의 주된 내러티브를 구성한다. 통사서에 ‘빈곤’ 서술이 등장하는 것은 발전주의적 인식과 ‘빈곤’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형성됨을 시사하며, 이 관계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은 근대 역사학의 발전주의를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특히 1960년대 이후 본격화된 한국사의 주제적·내재적 발전과정을 해명하려는 관점과 태도의 확산이 중요한 계기가 되며, 이러한 흐름이 통사 수준에서 반영되는 중요한 기점으로는 이기백의 『한국사신론』(1967)이 주목된다. 특히 ‘근대로의 통로’로서 주목받았던 조선 후기사 서술에서 ‘빈곤’ 서술 변화에 유의함으로써 역사적 시간의 질적 변화와 ‘빈곤’의 관계를 규명할 것이다. 발전 서사 속에 사회문제로서 ‘빈곤’이 완전히 결합되는 것은 민중사 단계에 이르러서이다. 민중사에서는 이전까지 축적된 ‘빈곤’ 관련 연구성과를 자원으로 활용하고 변형하는데, 이를 통해 ‘빈곤’이 발전 서사를 구성하는 중요한 매개로 배치되는 논리를 분석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검토한 통사서는 역사학에서 해당 통사가 갖는 사학사적 의미와 대중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황의돈의 『신편조선역사』(1923), 신채호의 『조선상고사』(1931), 백남운의 『조선사회경제사』(1933)와 『조선봉건사회경제사』 上(1937), 이병도의 『국사대관』(1952), 이기백의 『국사신론』(1961)과 『한국사신론』(1967; 1976), 한국민중사연구회의 『한국민중사』 I - II(1986), 한국역사연구회의 『한국사강의』(1989)와 『한국역사』(1992)이다. 검토과정에서 일차적으로는 각 사서들에서 ‘빈곤’, ‘궁핍’, ‘빈궁’, ‘가난’, ‘기아(굶주림)’와 같은 표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곳에 주목하였고, 경제적 처지가 열악하다든가, 생활이 극도로 열악하다든가,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웠다는 등 사회경제적 처지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서술적 표현 또한 검토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각 사서에서 제기하는 빈곤의 근본적인 원인과 극복방향, 발전서사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표현 자체보다는 사서 전체의 논리와 각 시대별 역사상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서의 전반적인 맥락 속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

2. 왕조사관의 연속과 계급문제로서 ‘빈곤’의 제기

빈곤은 전근대 시기에도 중요한 정치적 의제였다.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전근대 역사서에는 진휼, 구제 관련 기사가 다수 등장하며, 왕의 실정을 비판하는 근거로 백성들의 빈궁한 상황이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유교통치이념인 ‘보민(保民)’의 관점에서 왕이 백성의 생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과, ‘덕정(德政)’이라는 왕의 통치행위의 하나로 구제행위를 인식하는 것에서 비롯된다.³⁾ 즉 왕조 중심의 역사서술에서 빈자들에게 대한 구제는 치자의 덕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이자, 과거 국왕들에 대한 포폄을 통해 현재의 교훈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사에서 전근대 역사와 구별되는 근대적 역사개념의 탄생은 1906년경으로 여겨지며,⁴⁾ 이후 발간되는 역사서들에서는 시대구분, 서술체계와 서술방식 등 여러 부분에서 근대적 역사서술의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통사서에서 ‘빈곤’ 인식의 변화는 더디게 진행되는데, 이는 많은 역사서들이 근대 역사학의 편제와 서술방식을 차용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사료로서 전근대 사서들을 충실하게 활용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빈곤’에 대한 유교적 인식은 근대적인 형태의 역사서술에

3) 김윤희(2016), 「1894-1919년 근대빈민구제담론의 구조와 허구성」, 『한국사학보』 64, 고려사학회, pp. 225-227.

4) 도면희(2013), 「한국에서 근대적 역사 개념의 탄생」, 이신철 편, 『동아시아 근대 역사학과 한국의 역사인식』, pp. 171-172.

서도 상당 기간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일례로 현재의 《동국사략》(1906)은 획기적이고 근대적인 서술방법을 도입한 대한제국 최초의 근대 역사교과서로 평가받지만,⁵⁾ 빈곤문제 서술에 있어서는 왕의 정치를 평가하는 요소로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며, 사회변동과 빈곤문제가 연동되는 서술을 찾아보기 어렵다. 즉 체제 면에서는 근대적 방법을 도입하고 있음에도, 왕조사의 서술과 비교했을 때 내용상 단절적인 측면을 찾아보기 어렵다.

근대적 역사학의 도입 이후 통사서의 간행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1920년대였다. 3·1운동 이후 일제의 통치방식 전환, 조선학 교육에 대한 높은 열기 등은 통사 서술을 추동하는 사회적 요건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문화사학을 중심으로 여러 통사서들이 발간된다.⁶⁾ 다른 한편으로 1920년대는 빈곤 문제가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공론장에서의 정치투쟁의 의제로 떠오른 시기이기도 했다.⁷⁾ 1922년 발간된 한국 최초의 신조어 사전인 『현대신어석의(現代新語釋義)』에서는 “사회문제(社會問題)”라는 신조어를 “사회경제상 강자와 약자 간의 이해충돌,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구제하여 약자빈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일에 관한 총체의 문제”⁸⁾로 정의함으로써 ‘빈곤’과 ‘사회문제’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5) 이신철(2013), 『『동국사략』(현재)의 당대사 역술과 서술을 통해 본 한국 근대 역사학의 ‘국민 만들기’』, 이신철 편저, 『동아시아 근대 역사학과 한국의 역사인식』, 선인, p. 423.

6) 이 시기 발간된 문화사학의 황의돈의 『신편조선역사』(1923), 장도민의 『조선사요령』(1923), 안환의 『조선문명사』(1923), 박해묵의 『반만년조선역사』(1923), 권덕규의 『조선유기』 등이 있다(박종민(2014), 「‘조선사’의 서술과 역사지식 대중화 — 황의돈의 『중등조선역사』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31, p. 50 참고).

7) 이와 관련해서는 예지숙(2017), 『조선총독부 사회사업정책의 전개와 성격(1920년~1936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p. 1; 조경희(2016), 「1920년대 식민지조선 사회사업의 성격과 그 한계 — ‘방빈(防貧)’의 좌절에서 노동사업으로」, 『역사와 담론』 80, 호서사학회, pp. 104-105; 김윤희(2015), 「1920년대 경성부 사회사업과 빈민주택조사의 정치성」, 『사림』 54, 수선사학회, p. 35 참고.

있다. 이상과 같은 상황은 통사서술과 사회적인 ‘빈곤’ 담론이 만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사서술 상의 변화는 상당히 더디게 나타난다.

1920년대에 발간된 통사서 중 황의돈의 『신편조선역사』는 사학사적으로 주목받는 저작으로, 왕조 정치사가 아니라 민족의 성쇠를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 인과관계에 의한 서술체계를 갖추었다는 점, 발전적 시각에서 역사를 서술하려고 한다는 점 등에서 전근대사서의 체제와 형식을 분명히 탈피했으며, 근대 역사학의 면모를 갖춘 통사로 평가 받는다.⁹⁾ 그러나 해당 사서에서 ‘빈곤’이 다루어지는 방식에서는 이전과 큰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 일례로 다음과 같은 서술을 들 수 있다.

고구려(高句麗)의 봉상왕(烽上王)이 잔폭(殘暴)하고 황음(黃淫)하여 현신(賢臣) 달가(達賈)와 왕제(王弟) 돌고(咄固)를 죽이며 국정(國定)을 닦지 안코 사치(奢侈)를 전상(專尙)하며 여러 해 흉년(凶年)에 인민(人民)이 기곤(飢困)한데 민정(民情)을 돌아보지 않고 장려(壯麗)한 궁실(宮室)을 건축(建築)하기에 전력(專力)하여 국상(國相) 창조리(倉助利)의 충간(忠諫)을 듣지 아니하므로, 창조리(倉助利), 이에 국인(國人)으로부터 동조(同調)하여 왕(王)을 폐립(廢立)하고 돌고(咄固)의 자(子) 을불(乙弗)을 마저 세우니 이가 미천왕(美川王)이라.¹⁰⁾

제2편 중고사/제1기 삼국시대/
제7장 고구려의 척지(拓地)와 외쟁(外爭) (2)/창조리의 혁명

이에 따르면 “인민의 기곤”은 “민정을 돌아보지 않”는 “잔폭하고 황음”한 봉상왕으로부터 비롯되며, 이는 곧 왕권의 교체로 이어진다. 이러

8) 최록동, 『현대신어석의』, 한림과학원 편, 『한국근대신어사전』, 선인, p. 50.

9) 심승구(1994), 「황의돈」, 조동걸·한영우·박찬승 편,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하, p. 123, pp. 131-135.

10) 황의돈, 『新編朝鮮歷史』, 이문당, p. 21. 밑줄은 필자.

한 내용은 『삼국사기』의 내용을 사실상 요약한 것으로,¹¹⁾ 빈곤의 원인을 왕의 통치행위로부터 찾는 유교적인 ‘빈곤’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사학을 근대적 학문으로 정립시키는 데 큰 공을 세웠다고 평가받는 신채호의 경우에도, ‘빈곤’ 서술에 있어서는 큰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 『조선상고사』¹²⁾에서의 서술은 다음과 같다.

이리하여 모용외의 병사들이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하자 봉상왕이 이에 교만해지고 안일에 빠져 수년간의 흉년과 가뭄으로 인민들이 굶주리고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안의 인부들을 징발하여 궁실을 건축하니, 사람들이 더욱 흠어지고 달아나서 인구가 줄어들었다.

기원 300년에 이르러서는, 왕은 여러 신하들의 간쟁을 다 거절하고, 나라 안의 남녀로서 15세 이상 된 자는 전부 징발하여 궁실건축에 부역하게 하였다.

이에 ‘신가’ 창조리가 위협을 무릅쓰고 간하여 말하였다. “천재가 잦아서 수확을 하지 못하여 나라 안의 인민들이, 장정들은 구걸하기 위해 서방으로 흠어지고, 노약자들은 도랑이나 산골짜기에 빠져 죽고 있는데도 대왕께서는 이를 돌아보지 않고 굶주린 인민들을 몰아다가 토목공사의 일을 시키니, 이는 임금으로서 할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물며 북방에는 모용씨의 강적이 있어 날마다 우리의 틈을 엿보고 있으니, 대왕은 깊이 생각하소서. …”¹³⁾

제5편(2) 고구려의 중쇠와 북부여의 멸망/
제2장 고구려 대 선비 전쟁/
4. 모용외의 패퇴와 봉상왕의 교만과 포악

11) 『三國史記』 券第17, 高句麗本紀 第5 烽上王 참고.

12) 신채호의 대표적 저작으로 1931년에 조선일보에서 「조선사」라는 제목으로 연재된 글을 엮어서 출간한 것이다(신채호(1931), 박기봉 역(2006), 『조선상고사』, 비봉출판사, p. 10).

13) 신채호(1931), pp. 277-278. 밑줄은 필자.

위 인용문에서는 봉상왕의 실정을 나열하며 이로 인해 인민들이 기근이 발생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모용외의 패퇴와 봉상왕의 교만과 포악”이라는 절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신채호 역시도 빈곤의 원인을 왕의 통치행위로부터 찾는 유교적 인식을 반복하고 있다.

근대적 역사서로 평가받는 사서들에서 이와 같은 서술이 나타나는 것은 관련 부분에서 사료의 내용을 요약하여 인용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모두 ‘민족주의 사학’으로 분류되며 체제와 내용의 측면에서 근대 역사학의 면모를 갖추었지만, 사회경제적인 문제는 이들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기에 해당 부분에서는 전근대 역사서의 서술을 반복하게 된 것이다. 실제 황의돈의 통사는 전반적으로 경제사에 대한 서술 자체가 빈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¹⁴⁾ 신채호는 역사를 정신사·사상사 중심으로 파악한다는 특성을 갖는다.¹⁵⁾

일제 식민지기에 빈곤 문제를 사회분석의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하며 역사서술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것은 1930년대 유물사학으로, 특히 일본 본토 사학계에서도 인정받는 연구자였던 백남운의 『조선사회경제사』(1933)와 『조선봉건사회경제사』(1937)는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포문을 연 저서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¹⁶⁾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을 역사발전의 본질로 여기는 유물사관에 입각할 때, 빈곤의 근본적인 원인은 토지의 소유 여부에 따른 계급의 출현이다. 이에 따르면, 전근대의 주된 생산수단인 토지의 소유에 따라 계급이 발생하고,¹⁷⁾ 계급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권력기관으로서 국가가 등장하며,¹⁸⁾ 계급 간 빈부격차는 신분

14) 심승구(1994), p. 75, p. 138.

15) 박찬승(1994), 「신채호」, 조동걸·한영우·박찬승 편, p. 91.

16) 조동걸(1994), 「민족국가 건설운동기의 역사인식」, 조동걸·한영우·박찬승 편, p. 161; 정병준(2016), 「식민지 관계 역사학과 근대 학문으로서의 한국역사학의 태동」, 『사회와 역사』 제110집, p. 117.

17) 백남운(1933), 심우성 역(2004), 『조선사회경제사』, 동문선, p. 154.

18) 백남운(1933), p. 210.

제를 통해 제도화되고 지속적으로 심화된다.¹⁹⁾ 이처럼 민중의 빈곤화의 원인으로서 사유재산제도와 계급사회를 제기한 것은 이전까지의 사서들에서 빈곤 문제를 다루던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빈곤의 원인에 대한 백남운의 진단은 이전까지의 사서들에서 자료를 해석하고 인용하던 방식에 완전히 비판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가능했다. 앞서 황의돈, 신채호가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동일한 『삼국사기』 자료에 대해 백남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봉상왕 9년(330) 봄 정월에 지진이 있었다. 2월부터 가을 7월에 이르기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으므로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었다. 8월에 왕은 국내의 남녀 15세 이상을 징발하여 궁실을 수리하게 하니 백성들은 끼니에 주리고 일에 지쳐 이로 말미암아 도망해 갔다. 창조리가 간하여 말하였다. “천재가 자주 닥쳐 곡식이 익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은 (살) 곳을 잃어 장정들은 사망으로 흩어지고 늙은이와 어린이들은 구렁에서 뒹굴게 되었으니, 이는 진실로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근심하여 조심하고 반성할 때입니다. …” (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 제5)

이 원문은 흉년 때 궁실의 토목 공사를 일으킨 데에 대한 간언이지만, 일정한 생활을 잃어버리고 장정은 사망으로 흩어지고 노인과 어린 아이는 전락하여 기아선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최대의 생산 무대인 토지자본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즉 인민이 사망으로 흩어지고 죽어간 것은 토지의 상실에서 온 것이며, 예를 들어 제아무리 명군현상이 덕정을 베푼다 해도 노예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을 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²⁰⁾

제3편 노예국가 시대/제15장 고구려/제8절 고구려의 토지 제도

19) 이때 계급과 신분은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취급된다. 백남운(1933), pp. 156-157, 295, 480; 백남운(1937), 하일식 역(1993b), 『조선봉건사회경제사』(上) 2, 이론과 실천, p. 274.

20) 백남운(1933), pp. 244-245.

위에 따르면, 백남운은 인민의 기아를 왕의 특정 통치행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인식을 비판하며 왕조사관과의 명확한 단절점을 보여준다. 기아의 근본 원인은 인민이 생산수단인 “토지의 상실”에 있기 때문에, ‘덕정’의 구가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고문헌에서 “기아민이 발생한 원인으로 홍수, 가뭄, 병충해 등의 자연 현상에 책임을 전가하”였음을 비판하고, “실은 사유재산제에 의한 빈부의 격차”가 본질적인 원인이었다고 주장한다.²¹⁾ 이처럼 전근대 사서에서 제시하는 빈곤의 원인을 지배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일종의 ‘허위의식’으로 파악하는 관점에 의해, 백남운은 사료의 서술과는 완전히 다른 빈곤관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백남운이 이처럼 빈곤의 원인을 계급으로부터 찾기 때문에, 지배계급으로서의 국가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도출된다. 그에 따르면, 권농정책은 최대지주인 국가가 농업생산력을 촉진하여 인민으로부터 합리적인 착취를 기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²²⁾ 또한 당시에 ‘덕정’으로 구가되었던 진휼정책은 계급생산조직을 절대적으로 유지하는 기능을 했다는 점에서 회유책에 지나지 않으며,²³⁾ 환곡은 국가가 운영하는 일종의 고리대금으로 빈민을 부채노예로 만드는 미끼였다고 주장한다.²⁴⁾ 이처럼 백남운은 왕권의 정치적인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면의 경제구조와 지배-피지배 관계에 입각하여 왕의 통치행위를 재해석함으로써 기존의 시각을 뒤집고 있다.

결국 국가가 계급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므로 민중의 빈곤화는 갈수록 심화되기에, 이를 완화하는 것은 모순의 누적으로 인한 사회구성체의 이행과 발전이다. 사회적 모순의 누적은 신라 말 지방반란과 도적의 봉

21) 백남운(1933), pp. 301-302.

22) 백남운(1933), p. 317.

23) 백남운(1933), p. 288.

24) 백남운(1933), pp. 299-231.

기 등의 계급투쟁을 격화시키고,²⁵⁾ 이는 노예제가 아시아적 봉건제로 이행하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사회구성체의 이행을 통해 농민의 절박한 곤궁 상태는 일시적으로 완화되지만, 다시 봉건적 토지경제는 내적 모순을 확대시켜 고려시대의 농민일규(農民一揆)로 이어진다.²⁶⁾

이러한 백남운의 관점은 통사서 전반의 서술체제와 ‘발전’ 서사 속에 ‘빈곤’을 깊숙이 연관시키게 된다. 당시의 통사서에서는 서양식 시대구분을 채택하며 근대 역사서의 면모를 보이면서도 대체로 왕조교체를 중심으로 시대를 구분했던 것과 달리,²⁷⁾ 백남운은 사회구성체의 변화를 중심으로 시대를 구분하여 각 시대의 질적 변화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또한 『조선사회경제사』에서는 ‘노예국가’로 규정된 신라에 대한 서술에서, 마지막 절에서 ‘사회적 모순의 확대’라는 제목을 제시하고 소제목 배치에서는 ‘민중의 빈민화·관리의 가렴주구·지방의 반란·도적의 봉기’로 이어지는 과정을 제시한 뒤 ‘총결론’으로 나아가고 있다. 여기에서 백남운은 사회적 생산력의 자기운동은 민중의 빈곤화를 심화시켰고, 이는 곧 사회구성체의 이행을 촉진하였다고 서술한다. 즉 사회적 모순으로서 민중의 궁핍화가 점점 고조되고, 이는 지방반란과 도적의 봉기로 이어지며 노예제사회를 붕괴시키고 아시아적 봉건제로 이행하는 동력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백남운의 역사서술에서 나타난 ‘빈곤’ 인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지평을 보여준다. ‘빈곤’의 원인을 계급발생에 의한 빈부 격차의 문제로 짚은 것은 이 문제가 통치자 개인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본 것이다. 국가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시행하기도 하지만, 국가의 계급적인 성격으로 인해 민중

25) 백남운(1933), pp. 481-482.

26) 백남운(1937), 하일식 역(1993), 『조선봉건사회경제사』(上) 2, 이론과실천, p. 242.

27) 이병희(1994), 「미완의 조선봉건사회론: 『朝鮮封建社會經濟史(上)』(白南雲 改造社 1937)」, 『역사와 현실』 12, p. 214.

의 궁핍화는 해소되지 않고 모순은 지속적으로 퇴적된다. 그리고 이는 계급투쟁을 격화시킴으로써 사회구성체 전환의 필연적인 계기로 작동한다. 백남운은 이처럼 사회경제적인 해석을 역사서술에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빈곤’ 문제는 해당 사회의 총체적 성격을 인식하는 데에, 그리고 역사의 전개와 이행 문제를 다루는 ‘발전’ 서사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3. 전근대적 사회제도 문제로서의 ‘빈곤’의 발견과 내재적 발전의 가능성

해방 이후 열린 정치사회적 공간에서 역사학자들은 매우 활발히 움직이며, 신민족주의사학, 사회경제사학, 문헌고증사학의 경향들이 각축하며 역사 ‘만들기’ 운동이 전개된다.²⁸⁾ 그러나 분단정부 수립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남한의 이념적 지형은 매우 협소해졌고, 이로 인해 일제 식민지기에 역사서술에서 ‘빈곤’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했던 유물사학의 유산은 단절된다. 이후 한국사학계에서는 이념적 지향이 뚜렷하지 않고 실증연구를 강조하는 문헌고증사학이 주류를 이룬다. 그중에서도 이병도의 『국사대관』(1952)은 이 시기의 대표적인 통사서로, 개정증보판이 10쇄 이상 발행되고, 1957년 문교부에서 선정한 국제도서전시회 출판도서 중 현대 통사서로는 유일하게 포함되는 등²⁹⁾ 1960년대까지 학계는 물론이고 대중적인 한국사 인식에도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 나타난 ‘빈곤’ 인식은 빈곤 문제의 원인을 통치자 개인으로부터 찾는 유교적 관점과 조선 후기의 빈곤을 조선사회의 정체성(停滯性)의 지

28) 김정인(2010), 「내재적 발전론과 민족주의」, 『역사와 현실』 77, p. 186.

29) 「國際圖書展示會出品圖書 二百二十九種을 選定 (1)」, 『경향신문』, 1957년 11월 29일자.

표로 삼는 식민사학의 흔적이 발견된다.

전반적으로 『국사대관』에서 ‘빈곤’에 관련된 서술은 비중 자체가 매우 미미하며, 간혹 부패한 왕실과 중앙정치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유교적 관점의 흔적이 발견된다.³⁰⁾ 이처럼 빈곤의 원인을 위정자의 통치행위에 따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금이 “왕도정치(王道政治)를 표방(標榜)”하고 권농정책 및 구제정책을 비롯한 각종 “사회정책”을 펼치는 것은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³¹⁾

그런데 빈곤과 역사변동의 관계에 있어서 이병도가 조선 후기의 빈곤 문제와 이에 따른 사회의 혼란상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점은 매우 특징적이다. 다른 시기에 빈곤 관련 서술이 굉장히 미미한 반면, “제4 지배계급의 분열과 농촌사회의 붕괴”, “제12 삼정의 문란과 민중의 동요”와 같은 장에서는 조선 후기 농촌사회의 열악한 실상과 그 원인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병도가 빈곤문제의 구체적 원인으로 짚는 것은 부세 “제도의 결함”보다는 “제도를 나쁘게 운용하는 관리”와 “그런 관리를 내보내는 어지러운 조정”으로,³²⁾ 당쟁으로 인해 부패한 조정이 민생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것에 초점이 있다.

이러한 서술은 조선시대를 정체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이병도의 부정적 시각과 관련이 있다. 그는 고려·조선의 교체에 질적인 변화를 상정하지 않으며,³³⁾ 조선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례없이 편협하고 차별이 심한 사회였다는 점을 곳곳에서 강조한다.³⁴⁾ 특히 그는 조선의 정치형태인 당쟁을 조선의 발달을 저해한 중대한 원인으로 이해하고, 이를 조선 후기 빈곤문제가 확대된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조선사회가 정체

30) 이병도(1952), 『國史大觀』, 白映社, p. 139 등.

31) 이병도(1952), p. 167.

32) 이병도(1952), pp. 433-444.

33) 이병도(1952), p. 291.

34) 이병도(1952), p. 292, 325.

되었다는 시각의 일환에서 조선 후기사회의 빈곤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 는 것이다. 이는 빈곤과 역사변동을 상충되는 것으로, 즉 빈곤의 심화가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각은 1960년대 이후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된다.

1960년대는 한국 역사학의 또 다른 획기였다. 4·19 민중항쟁을 거치 며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한 대중적 열망이 높아지고, 역사학계에서 는 본격적으로 식민주의 역사학을 비판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려는 흐름 이 등장하게 된다. 본격적인 기점을 마련한 것은 이기백의 『국사신론』 (1961)으로,³⁵⁾ 이기백은 서론에서 식민사학의 특징으로 반도적 성격론, 사대주의론, 당파성론, 정체성론을 제기하며 한국사의 내재적이고 주체 적인 발전과정에 주목할 것을 요청했다.

이기백의 『국사신론』은 ‘빈곤’ 인식에 있어서도 남한 학계의 새로운 기점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기백은 빈곤의 원인을 전근 대의 사회제도인 신분제도와 부세제도로부터 구조적으로 기인하고 있음 을 지적한다. 다음과 같은 서술은 이기백의 진단을 보여준다.

귀족들은 국가감에 입학하여 학문을 닦을 수 있는 지식계급이요, 과 거나 음서에 의해 관직을 차지할 수 있는 관료계급이요, 과전·공음전 ·녹봉·사전(賜田) 등으로 부를 누릴 수 있는 유산계급이었다. ...

지배계급 밑에서 피지배계급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은 농민 들이었다. 농민은 보통 백정이라고 불리었는데 그것은 특정한 직역 이 없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수조권에 의한 토지의 급여 를 받을 수가 없었고 오직 경작권에 의한 토지의 지배가 가능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4분의 1의 조를 바쳐야 했는데, 전제가 문란함에 따라 조세는 더욱 상승하여 갔다. 조 뿐만이 아니라 대개는 포로써 바치는 잡공이 있었는데 때로는 과실공·마공 등 특산물로써 하는

35) 李基白(1978), 韓國史學의 方向, p. 121.

경우도 있었다. 또 16세 이상 60세까지의 장정들은 力役의 의무가 있어서 각종의 토목공사에 동원되었다. ... 이 밖에도 無端米라든가 염세 등의 잡세가 붙었던 것이다. 비록 형식상 국자감의 율학·산학·서학이나 지방의 향학에 입학할 자격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식하였고 관리로 출세 하지도 못하였다. 말은 양민이라고 하지만은 국가에 대한 권리는 없고 의무만이 지워진 사회층이었다. ...

이러한 피지배계급의 생활은 양반귀족의 사치한 생활에 비하여 비참한 것이었다. ... 양민인 농민이나 각종의 천민들은 빈궁에 쪼들린 생활을 면할 길이 없었다. 국가에서 이들을 위한 사회정책이 필요하게 된 것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최소한도의 구체책이나마 마련해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 그러나 이러한 고식적인 사회정책이 구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은 스스로 명백한 일로서 정치와 경제의 문란은 이러한 사회적 모순을 더욱 조장하게 되었던 것이다.³⁶⁾

제4편 고려왕조/제2장 귀족정치와 그 문화/민중생활

일반 국민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던 것은 농업·공업·상업 등에 종사하는 상민이었다. ... 그 중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이주의 자유가 없는 흠에 매어있는 사람이었다. ... 이들은 양반과는 반대로 국가에 대해 스스로 주장할 권리는 거의 없었다. 반면에 부담해야 할 의무만을 잔뜩 짊어지고 있었다.

... 이러한 모든 부담은 그들의 수입에 비해 엄청나게 무거운 것이었다. 그러므로 농민들의 생활은 곤궁에 쪼들리고 빛에 억매어 있었다. 농민들이 자본을 축적해서 상공업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길은 막히고 있었다. ... (장시는) 기근이라든가 병역이나 租賦를 피하여 도망한 농민들이 모여서 이룬 것이었다. 이러한 성격의 場門은 국가의

36) 이기백(1961), 『國史新論』, 泰成社, pp. 142-144. 강조·밑줄은 필자.

존립을 위협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고 게다가 농본역상적인 사상도 작용하여 국가의 禁壓을 받았다.³⁷⁾

제5편 조선왕조/제2장 조선왕조의 정치와 사회/민중사회

이에 따르면 지식계급, 관인계급, 유산계급, 그리고 면역특권까지 갖고 있는 귀족·양반들과 달리, 피지배층의 대부분인 농민들은 경제적 권리, 교육의 권리, 직업선택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고 있지 못했다. 그럼에도 조세·공납·역의 의무와 각종 잡세의 부담은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부과되었으며, 이러한 부담은 농민들의 수입을 초과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생활은 일반적으로 곤궁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즉 이기백은 민중생활의 빈곤이 특정한 정치형태나 정치집단의 통치행위로부터 비롯되는 문제가 아니라, 특정 사회층에게 과중한 의무가 집중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한다. 권리·의무의 불평등한 분배로부터 비롯되는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다. 물론 전제의 문란함, 지배층의 대토지 소유 확대, 전쟁과 같은 요인들은 시기별로 ‘빈곤’을 확대시키는 정세적인 요소로 작동하지만, 전반적인 민중생활에서 부세부담은 일반적으로 과중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기백의 분석은 경제적 빈곤의 문제를 교육·직업과 관련된 문화적·사회적 요인과의 관련 속에서 배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피지배계급은 경제적인 특권으로부터 박탈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고 직업을 선택할 사회적 자유, 상업 진출을 통해 자본을 축적할 경제활동의 자유를 종합적으로 박탈당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빈곤의 문제가 단지 물질적인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 지식의 수준, 직업선택이 결합된 사회적 신분의 표지임을 제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빈곤 문제가 권리·의무를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전근대의 사회제도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시정하지 않는 국가의 행

37) 이기백(1961), pp. 213-215. 강조·밑줄은 필자.

위는 빈곤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극복방안이 될 수 없다. 즉 사회정책은 조세부족을 보충하려는 “최소한도의 구제책”이며 “고식적인 사회정책”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³⁸⁾ 이와 같은 빈곤의 원인과 극복방안에 대한 이기백의 진단은 일제 식민지기에 빈곤 문제를 선도적으로 통사서에 반영했던 유물사관의 전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남한 학계 독자적으로 ‘전근대 사회제도의 문제로서의 빈곤’이라는 새로운 분석을 제기해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빈곤과 역사변동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국사신문』에 나타난 이기백의 인식은 이병도와 공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조선 후기 사회가 빈곤했고 이로 인해 근대로 이행할 수 없었다는 서사이다. 이기백의 서술에 따르면, 전근대적 신분제도에 근거한 부세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조선 후기에 이르면 농촌의 피폐는 매우 심각해지며, 이는 조선의 근대 이행을 가로막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다뤄진다. 이기백은 “8장 사회의 혼란”에서 “삼정의 문란-농촌의 피폐-민란의 빈발”로 이어지는 소재목 구성을 통해 조선 후기 부세제도의 문제로부터 비롯된 농촌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짚으며, 이렇게 “가난에 쪼들은 농촌”에서는 “순조로운 사회발전을 기대할 수 없었”고, “자율적인 근대화への 길 이 막”히게 되었다고 서술한다.³⁹⁾

빈곤과 근대이행의 문제에 대한 서술은 『한국사신문』(1967; 1976)에서는 완전히 변화한다. 1960년대를 거치며 한국 역사학계에는 한국사의 내재적·주체적 발전 가능성을 탐색하는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특히 조선 후기를 근대로의 전환기로 파악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이를 통해 이 시기 한국사 연구는 양적·질적으로 크게 확장되며, 이기백은 시대구분과 체제를 완전히 달리하는⁴⁰⁾ 『한국사신문』의 발간을 통

38) 이기백(1961), pp. 143-144.

39) 이기백(1961), p. 227.

40) 노용필(2009), 「이기백 『국사신문』·『한국사신문』의 체제와 저술 목표 (下)」, 『한

해 이러한 연구성과들을 적극 반영한다. 이처럼 조선 후기로부터 근대 이행의 가능성을 찾는 과정에서, 조선 후기 ‘빈곤’ 서술은 축소된다.

먼저 장절과 소제목의 변화를 살펴보면, 『국사신론』에서는 “제8장 사회의 혼란” 하의 “농촌의 피폐”, “상공업의 부진”과 같이 조선 후기가 정체되었음을 시사하는 소제목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신론』(1967)에서는 “제11장 농촌의 분화와 상업자본의 발달”, “제12장 양반신분체제의 변화와 농민의 반란”을, 『한국사신론』(1976)에서는 “제11장 광작농민과 도고상인의 성장”, “제12장 양반신분체제의 동요와 농민의 반란”와 같은 장 제목을 통해 조선 후기의 발달상을 다루고 있다.

『한국사신론』에서도 여전히 빈곤의 원인으로서 신분제도와 부세제도의 문제를 지적하지만, 조선 후기의 사회상 자체를 ‘빈곤’, ‘혼란’, ‘피폐’ 등으로 표상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분화’, ‘발달’, ‘변화’, ‘성장’과 같은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발전적인 역사상을 구성한다. 또한 이기백이 가난한 농촌생활상을 보여주는 예시로서 사용했던 계와 구황작물에 대한 서술은 “농촌의 피폐”라는 소제목에서 1967년에는 “제2절 농민의 반란/계와 구황식물”이라는 절·소제목으로, 1976년에는 “제3절 농민의 항거/계의 유행”이라는 절·소제목으로 옮겨지면서 빈곤 상태를 강조하기 보다는 농민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방향의 서술을 지향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처럼 조선 후기 근대 이행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 조선 후기 사회상을 ‘빈곤’으로 표상하는 서술은 다소 절제되고 농촌의 분화와 발전상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문의 내용에서는 조선 후기 농민들의 빈곤 상태가 종종 언급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영세소작농으로 몰락한 농민들의 생활은 가난에 쪼들”렸으며, “흉년이 되면 각지에 기민”이 발생하고 “기사자가 속출”했다는 서술⁴¹⁾ 등을 통해 농민들이 겪는 생활상의 어려움은 여전히 제시된다.

『국사학사학보』 20, p. 9.

41) 이기백(1976), 『한국사신론』, 一潮閣, p. 303.

그러나 이는 농촌의 분화를 전제한 상태에서 부농으로 성장하지 못한 일부 농민들이 겪었던 일로서 조선의 사회상 전체를 표상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또한 이는 양반사회에 대한 반항으로 이어지면서 조선 후기 발전적인 변화상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배치된다.

이상으로 살펴본 이기백의 ‘빈곤’ 인식은 분단 이후 유물사학과와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한국사학계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빈곤’ 문제를 해석하는 준거를 마련하는 계기를 보여준다. 신분제도에 따른 사회구성원 간의 불평등과 피지배층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사회적 의무는 민중들이 대체로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되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여기에는 신분제와 이에 근거한 부세제도의 근본적인 변화, 즉 구성원 간의 권리의무를 평등하게 분배하는 동등한 ‘국민’에 대한 상상이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근대로의 통로’라고 여겨지는 조선 후기의 ‘빈곤’에 대한 강조는 조선이 근대로 전환될 수 있는 내적 가능성을 부정하는 정체성론의 주된 논리였다. 그러나 1960년대 내재적 발전론에 근거한 연구의 축적과 역사인식의 변화에 따라, 이기백의 『한국사신론』(1967; 1976)에서는 빈곤 서술의 축소를 통해 한국사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근대화로의 가능성이 부각된다. 이는 사회발전과 ‘빈곤’을 상충된 것으로 사고하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4. 유물사학의 복원과 ‘빈곤’-‘발전’ 서사의 착종

1960년대 초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내재적 발전을 강조하는 연구흐름은 1960년대에서 1970년대를 거치며 일반적인 것으로 자리를 잡는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단일한 역사인식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균열을 내포한 것이었다. 이러한 균열은 1970년대 분단과 민중의 재인식을 바탕

으로 실천적 학문을 지향하는 흐름인 ‘민중적 민족주의’의 등장을 통해 표출되었고, ‘민중적 민족주의’의 조류는 1980년대 마르크스주의와의 만남을 통해 ‘민중사학’을 형성하게 된다.⁴²⁾

여기에서는 민중사학에 기초한 대표적인 역사서로 『한국민중사』 I, II(1987)와 『한국사강의』(1989), 『한국역사』(1992)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⁴³⁾ 『한국민중사』는 1984년 최초로 민중사학을 내세운 연구단체로 출범한 ‘망원한국사연구실’에서 간행한 책이다. 이 책은 발간 당시 ‘민중사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주목받으며 민중사 논쟁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했으며,⁴⁴⁾ 1992년까지 8만여 권이 팔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또한 이후 한국역사연구회에서 출간한 『한국사강의』는 학계와 출판계로부터 ‘대체교과서’로 불리며 1년 사이에 4만여 부가 판매될 정도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책으로, 이로 말미암아 대체교과서 출간이 촉진된다.⁴⁵⁾ 이어 한국역사연구회는 민중사학의 사관과 사론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며

42) 내재적 발전론의 분화와 민중사학의 형성에 대해서는 신주백(2014), 「관점과 태도로서 ‘내재적 발전’의 분화와 민중적 민족주의 역사학의 등장 — 민중의 재인식과 분단의 발견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배성준(2010), 「1980~90년대 민중사학의 형성과 소멸」, 『역사문제연구』 23을 참고.

43) 이러한 역사서들은 서술체제와 내용에서의 차이도 상당히 크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빈곤’에 대한 인식을 상당 부분 공유하기에, 본고에서는 이들의 차이보다는 공통된 인식지반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한다.

44) “『韓國民衆史』 관련 教授·대학원생 聲明”, 『경향신문』, 1987년 5월 30일; “민중사 논쟁 활발”, 『동아일보』, 1987년 6월 1일; “『한국민중사』 재판 「법의 저울」 공정했나”, 『동아일보』, 1987년 8월 20일; “8만권이 팔려… 공안당국이 더 정독 한국민중사 I II”, 『한겨레』, 1992년 5월 27일 참고.

45) “『대체교과서』 대학강단서 인기, ‘한국사강의’, ‘새로운 사회학 강의’ 등 10여종”, 『한겨레』, 1990년 3월 13일.

이 책은 통사체제가 아닌 주제별 강좌식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단군·고조선에서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사의 전 시기를 다루며 사회구성체론에 입각하여 각 시기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이후 한국역사연구회에서 발간한 『한국역사』에 별도의 서론이 없는 데 비해, 『한국사강의』는 총론을 통해 사관과 시대구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한국역사』를 발간한다.⁴⁶⁾

민중사학은 ‘빈곤’ 인식 변화의 또 다른 전기를 마련한다. 이들은 통사서의 수준에서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가장 적극적으로 다루었는데, 이는 강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이전까지 축적된 역사적 지식을 활용하고 변형함으로써 가능했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남한에서 단절되었던 계급문제로서 ‘빈곤’을 인식하는 유물사학의 관점을 복원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1960~70년대 한국사를 내재적·주체적 발전과정으로 인식하는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했다. 일제 식민지기 유물사학의 역사의식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분단기 남한의 ‘민족주의 사학’을 비판한다는 강한 자기인식 하에, 양적·질적으로 풍부하게 축적된 내재적 발전론적 연구성과를 의식하면서 이를 자신들의 역사의식에 따라 재구성했던 것이다.

민중사학은 사적유물론과 사회구성체론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문제로서 빈곤의 원인과 극복방안에 대한 인식의 기본 틀은 백남운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나 이들의 백남운에 대한 평가와 수용방식은 일면 양가적인데, 일제 식민지기의 반제 민족사학 중에서 유물사학에 입각하였다는 점을 매우 높게 평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계적 역사관”, “경제결정론”, “발전단계의 공식주의” 등으로 비판하며,⁴⁷⁾ 마르크스주의의 교조주의적 수용⁴⁸⁾이나 프롤레타리아 계급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좌편향적 오류를 지적하기 때문이다.

먼저 민중사학은 빈곤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토지소유를 둘러싼 생산관계의 모순을 지적함으로써 계급적 인식을 복원하고, 전근대 사회제도의 문제로서 빈곤을 바라보는 시각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이들은 백남운이 주장했던 것과 유사하게 사유재산제도와 계급의 발생, 그리고 국가성립을 연동하여 파악하며,⁴⁹⁾ 빈부의 격차와 계급 발생을 제도화한 장치

46) 배성준(2010), p. 50.

47) 한국민중사연구회(1987a), 『한국민중사』 I, 풀빛, p. 30.

48) 한국역사연구회(1989), 『한국사강의』, 한울아카데미, p. 30.

로서 신분제를 지목한다.⁵⁰⁾ 이러한 관점은 빈곤 문제의 원인을 신분제도 · 부세제도와 같은 전근대 사회제도로부터 찾는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이기백이 경제외적 제도인 신분제로부터 경제적 문제가 비롯된다는 식의 서술을 취했다면, 민중사학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 경제적 관계를 바탕으로 사회제도로서의 신분제가 마련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빈곤의 원인으로서는 계급과 사회제도에 대한 민중사학의 관점은 구체적으로 조선 후기 빈곤문제의 핵심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던 ‘삼정문란’에 대한 복합적인 인식에서도 드러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기백에게 삼정의 문란은 신분제도에 기반을 둔 부세제도의 문제였다. 그러나 민중사학은 ‘삼정문란’의 원인을 부세제도로부터 찾는 것을 비사회구성체적 입장으로 비판하고,⁵¹⁾ 중세 · 봉건제의 “기본모순”⁵²⁾을 지주전호제로 파악한다. ‘삼정문란’으로 표현되는 부세제도 운영상의 문제가 실제 심각했고,⁵³⁾ 이 시기에 벌어진 농민항쟁이 대체로 부세제도를 둘러싼 것이었다는 것은 일면 사실이지만,⁵⁴⁾ 민중사학에 따르면 조선 후기의 가장 근

49) 한국민중사연구회 편(1987), pp. 62-63; 한국역사연구회(1989), pp. 68-69; 한국역사연구회(1992), 『한국역사』, 역사비평사, p. 26. 『한국민중사』 I의 “계급과 국가의 발생”, 『한국사강의』에서 “사회의 분열과 국가의 성립”, 『한국역사』에서 “계급의 발생과 국가의 성립”이라는 소제목은 국가에 대한 민중사학의 관점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50) 한국민중사연구회 편(1987), p. 97; 한국역사연구회(1989), p. 96; 한국역사연구회(1992), p. 54.

51) 방기중(1986), 「조선 후기 수취 제도 · 민란 연구의 현황과 ‘국사’ 교과서의 서술」, 『역사교육』 39. 1986년 당시 방기중은 한국역사연구회의 전신인 한국근대사연구회 준비모임의 일원이었다(박찬승(1993), 「한국 사회주의사상사 연구의 초석농기: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 방기중, 역사비평사, 1992」, 『역사비평』 20, p. 344).

52) 한국민중사연구회 편(1986b), 『한국민중사』 II, 풀빛, 54쪽. 그밖에도 『한국사강의』에서는 “지주전호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적대적 모순관계”(140)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53) 한국민중사연구회 편(1986b), p. 39; 한국역사연구회(1992), pp. 178-179.

54) 한국역사연구회(1989), pp. 197-198.

본적인 문제는 토지소유의 양극화로 인해 농촌 내에서 지주와 전호농민, 부농과 빈농 간의 계급대립이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즉 신분변동과 부세 수탈은 서로가 원인과 결과로 작용하며 당대의 ‘주요모순’으로 현상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기본모순’으로서 지주소작문제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이다.⁵⁵⁾ 이처럼 ‘기본모순’과 ‘주요모순’의 관계로 지주제와 부세제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빈곤의 원인에서 현상과 본질을 분리하여 중층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이처럼 민중사학은 빈곤의 근본 원인을 사회제도가 아닌 생산관계로 짚었던 백남운의 인식을 복원함으로써 이기백류의 인식을 비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계급관계와 전근대 사회제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들은 백남운과 다른 인식을 드러낸다. 일례로 앞서 백남운이 계급을 유지·고정시키는 장치로서 계급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했던 신분제에 대해, 민중사학에서는 계급관계에 대한 사회제도의 상대적 자율성이라는 논리를 구성함으로써 양자의 관계를 보다 유연하게 파악하고 있다. 『한국역사』에서는 신분제를 다루는 별도의 보설을 통해 경제적 차별을 고정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신분제를 사고하면서도, 같은 신분 내의 계층이동이 가능하며 이것이 축적되면 계급관계와 신분제 전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⁵⁶⁾ 이는 연구성과의 축적을 통해 밝혀진 시기별 신분제

55) 정진영(1998),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p. 397 참고. 해당 사회의 발전단계에서 보편적인 모순으로서 “기본모순”과 부차적인 “주요모순”을 구분하는 논리는 기본적으로 마오쩌둥의 사상적 영향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모택동 저, 「모순론」, 김승일 역(2001), 『모택동 선집』 1, 범우사 참고). 한국에서 사용되는 용례를 경향신문, 동아일보를 통해 간략히 살펴보면, “주요모순”이라는 표현은 1970년대에 주로 ‘중공’ 관련 기사에서 간헐적으로 등장하다가, 1985년 한국사회구성체논쟁이 지면에 등장하면서 “주요모순”, “기본모순”이라는 표현이 한국사회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논쟁에서의 쟁점은 한국 자본주의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었으나, 어느 시점에는 전근대 시기의 사회구성체를 설명하는 역사 분석 도구로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순을 주요한 것과 부차적인 것으로 나누어 중층적으로 인식하는 1980년대 한국 변혁이론의 특정한 어법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 실증적 변화를 통사서에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함과 동시에, 무엇보다 조선 후기의 변화를 염두에 둔 것이다. 각종 사회제도와 조선 후기 사회상의 변화에 대해 상당한 역사적 지식이 축적된 상황에서, 민중사학은 관련된 연구성과를 포괄하여 빈곤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논리를 생산해낸 것이다.

한편, 민중사학에서 진단하는 빈곤 문제의 근본원인은 생산관계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빈곤의 극복방안으로서 국가의 사회정책에 대한 평가는 백남운과 마찬가지로 매우 부정적이다. 국가가 펼치는 구휼정책, 권농정책, 제도 개편 등의 사회정책은 ‘위민정치’, ‘민본정치’와 같은 지배계급의 이념과는 달리, 농민을 보호하기보다는 농민의 단순재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조세수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만적인 정책으로 보고 있다.⁵⁷⁾ 지배층의 계급적 한계로 인해 구휼 조치나 제도의 개편은 중세 · 봉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체로 임시적인 회유에 머무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평가는 국가의 계급성으로 인해 빈곤문제의 극복 주체가 될 수 없음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백남운과 인식론적 틀이 유사하지만, 국가가 사회정책을 펼치는 구체적 의도에 대해 백남운이 주로 노동력 동원과 조세수취를 지속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던 것에서 나아가, 민중사학에서는 사회정책의 사회혁명 방지 효과에 보다 주목한다. 민중사학에서 다수 대중의 빈곤화는 사회혁명의 객관적인 조건에 해당하는데, 국가가 펼치는 사회정책은 봉건적 억압과 착취의 완화를 통해 사회적 모순의 압력을 폭발적 이하로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⁵⁸⁾ 이는 사회정책을 ‘민중’의 객관적 · 주체적 역량의 확보를 저지하려는 지배계급의 의도로 해석한

56) 한국역사연구회(1992), p. 199.

57) 한국역사연구회(1989), pp. 101-102, p. 196, pp. 131-132, pp. 193-196; 한국역사연구회(1992), p. 83 외.

58) 한국민중사연구회(1987a), pp. 137-138, p. 156.

것으로, 역사주체로서 ‘민중’의 형성과정에 초점을 두는 민중사학의 관심사를 잘 보여준다.

이처럼 민중사학이 설정하는 사회혁명의 주체로서 민중의 성장은 객관적 조건으로서 빈곤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에 따라 ‘빈곤’은 민중사학의 ‘발전’ 서사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배치된다. 그리고 이는 1960년대 이후 조선 후기 농촌의 발전상을 제시했던 내재적 발전론의 성과에 크게 의존하면서도, ‘발전’과 ‘빈곤’의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구성하여 양자를 완전히 결합시킴으로써 가능했다. 먼저 민중사학에서는 이기백의 『한국사신론』과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 농촌의 ‘분화’를 중요시하며, 이러한 변화를 ‘성장’, ‘발전’과 같은 긍정적인 용어를 통해 파악한다.⁵⁹⁾ 그러나 내재적 발전론의 성과가 적극 반영된 『한국사신론』에서는 ‘빈곤’을 곧 ‘정체’로 인식하는 도식 속에서 ‘발전’을 강조하기 위해 조선 후기의 빈곤문제가 차지하는 위상을 낮추었다면, 민중사학의 사서들은 농민의 계층분화 과정에서 특히 ‘빈농’의 대량생산에 주목한다. 조선 후기 농촌경제의 발전은 “빛과 그림자”를 가지고 있었고, 극히 소수의 부농이 등장한 것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이들이 토지를 상실하고 몰락했다는 것이다.⁶⁰⁾ 이로 인해 조선 후기 생산력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격차는 심화되어 대중적 빈곤은 훨씬 일반화된다.⁶¹⁾ 그리고 이와 같은

59) 한국민중사연구회 편(1987b), “제1장 근대를 향한 민중적 세계의 발전”, pp. 21-30; 한국역사연구회(1989), “제6장 농민층의 성장과 봉건체제의 동요”, pp. 183-194; 한국역사연구회(1992), “제9장 봉건사회 해체기의 경제와 사회”, pp. 144-156.

60) 한국민중사연구회 편(1987b), pp. 23-24.

61) 한국역사연구회(1989), pp. 197-198. 민중사학의 ‘대중적 빈곤’에 대한 인식은 농민층의 ‘분화’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백남운과 결정적인 차이를 갖는다. 백남운은 피지배계급 내에서의 분화를 상정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직접생산자인 농민이 해당 사회구성체의 저항세력으로 직접 연결된다. 이에 따라 ‘빈농’이라는 표현은 잘 등장하지 않으며, ‘빈민’이라는 표현은 인민의 일반적인 빈곤상태를 일컫는 것이다. 이는 『한국민중사』 1에서 16세기, 『한국역사』에서 12세기부터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농민층의 분화경향을 제시하며 성장한 농민 이면에 존재하는 몰락한

조선 후기 대중적 빈곤에 대한 강조는 사회혁명의 객관적인 조건이 마련됨을 의미하기에, 조선의 정체성이 아니라 역동성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표상된다.

내재적 발전론은 ‘빈곤’이 ‘발전’을 저해한다는 인식을 조선사회정체론과 공유했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조선 후기 사회상의 초점을 ‘빈곤’에서 ‘분화’와 ‘발전’으로 옮겨놓았다. 이는 빈곤 서술의 축소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중사학에서는 이러한 ‘분화’와 ‘발전’의 이면에 부의 집중, 수탈과 착취로 인해 ‘빈곤’이 양산됨을 지목하고, ‘대중적 빈곤’의 확산을 통해 사회혁명의 객관적 조건이 마련된다는 서사를 통해 역사서술의 초점에서 빗겨나 있었던 ‘빈곤’을 서술의 중심으로 불러온다. 조선 후기 농촌사회의 피폐는 구성원의 일부를 경제적으로 더욱 몰락시켜 이들이 봉건체제의 가장 철저한 저항세력이 되도록 만드는⁶²⁾ “농민항쟁의 배양기”⁶³⁾였다는 표현은 이를 잘 보여준다. 즉 민중사학은 ‘빈곤’이 역사발전의 주체를 생산한다는 논리를 통해 ‘빈곤’과 ‘발전’을 상충된 것으로 인식하던 관점을 전복시킨다.

이로써 ‘빈곤’은 발전 서사와 밀착되고, 민중사학의 서술체제와 내용상에서 ‘빈곤’ 서술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시기별 생산력과 생산관계에 대한 서술에서, 사회변화의 직·간접적 계기로서, 수탈과 착취로

농민을 ‘빈농’으로 일컫는 것과는 의미를 달리한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변동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저항주체 설정의 차이로도 이어지는데, 백남운이 직접생산자인 농민을 저항세력으로 파악하는 반면, 민중사학에서는 조선 후기 봉건체제에 대한 저항세력으로 빈농층, 부농층, 지식층, 신흥상공업계층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연합전선으로서 ‘민중’을 중시한다. 그럼에도 민중사학에서 빈농층이 중요한 것은 ‘민중’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계층 중에서 타협 없이 봉건지배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해당 시기 모순의 담지자를 빈농으로 보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연합전선의 이념과 세력의 측면에서 빈농의 주도성이 확보되는 과정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62) 한국민중사연구회 편(1987b), p. 20.

63) 한국역사연구회(1989), p. 208.

고통 받는 피지배층의 생활상으로서, 나아가 저항주체의 형성조건으로서 ‘빈곤’은 지속적으로 언급되며 그 양상과 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이는 역사서술에서 소외되었던 다수의 사람들을 역사의 무대로 끌어올리고, 사회적인 배제와 주변화의 기제들을 밝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빈곤’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빈곤’과 관련된 역사서술과 지식의 확대로도 이어졌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빈곤’이 ‘발전’ 개념과 그만큼 밀착되고, ‘빈곤’에 대한 관심이 역사발전의 주체를 생산하는 조건이라는 측면으로 한정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민중사학은 계급문제로서의 빈곤인식을 제기했던 일제 식민지기의 인식을 복원하는 한편, 1960년대 이후 남한에서 독자적으로 발전시켜 온 연구성과를 변용하여 통사서의 수준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빈곤’ 문제를 역사서술로 끌어온다. ‘빈곤’을 양산한 전근대의 사회제도로서 신분제도와 부세제도를 지목해온 역사의식을 전면적으로 비판하면서도, 사회제도의 상대적 자율성이라는 장치를 마련하여 시기별 사회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변화를 밝혀온 연구성과를 포괄하고자 했다. 또한 조선 후기의 대중적 빈곤을 ‘민중’이 형성되는 객관적 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빈곤’은 근대 역사학의 ‘발전’ 서사와 완전히 결합된다.

5. 나가며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통사서의 전근대사 서술에 나타난 ‘빈곤’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사회문제로서 ‘빈곤’에 대한 인식과 서술이 통사서에 등장하는 계기에 주목하였고, 통사서술에서 ‘발전’ 서사가 본격화되는 1960년대 이후부터는 ‘빈곤’과 ‘발전’의 관계 변화에 주목하여 통사서에서 ‘빈곤’의 위상변화를 추적했다. ‘빈곤’에 대한 근대적 인식은 ‘빈곤’을 극복되어야 할 ‘사회문제’로 여긴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지평을

보여주었지만, ‘빈곤’을 야기하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진단에 따라, 또 ‘발전’의 내용과 주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통사서에서의 ‘빈곤’ 서술은 다르게 나타났다.

‘빈곤’이 왕 개인의 통치행위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보는 전통적이고 유교적인 관점은 근대 역사학의 등장 이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되어 일제 식민지기 황의돈의 『신편조선역사』, 신채호의 『조선상고사』, 그리고 해방 이후 이병도의 『국사대관』에도 일부 나타났다. 해당 역사서들이 근대 역사서로 분류할 수 있는 서술체제와 내용을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사를 서술하는 역사가의 의도에서 ‘빈곤’이라는 사회경제적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기에 전근대 사서에 나타난 ‘빈곤’ 인식을 역사적 사실로서 받아들인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역사서술에 가져온 계기는 백남운의 『조선사회경제사』와 『조선봉건사회경제사』였다. 그는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빈곤’이 사유재산제도와 계급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인식에서 기존 사료들을 재해석하고, 왕의 통치행위 이면의 경제구조와 지배-피지배 관계를 해석하고자 했다. 이는 국가를 계급지배의 도구로 보는 것이었기에, 국가의 사회정책을 통한 빈곤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계급투쟁을 통한 사회구성체의 이행을 전망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물사관의 ‘빈곤’에 대한 입장은 해방과 분단 이후 남한에서의 이념적 지형이 협소해지면서 단절된다. 이에 남한에서는 독자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전근대 시기의 ‘빈곤’ 문제를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는데, 이기백의 『국사신문』에서 전근대 시기의 사회제도인 신분제와 부세제의 문제로서 ‘빈곤’을 바라보는 시각이 등장한 것이다. 지배층이 특권을 독점하고 피지배층이 많은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사회적 의무만을 일방적으로 지는 제도적 현실로 인해, 피지배층은 지속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그 내용이다. 또한 이러한 분석에서 ‘빈곤’은 교육, 직업, 지식, 경제활동 등과 함께 종합적인

사회적 신분의 지표로 인식된다. 이는 사회구성원간의 평등과 권리·의무의 동등한 분배를 요구하는 근대적인 지향을 통해 해결될 수 있었다.

한편, 조선사회의 근대이행의 가능성을 부정한 식민사학의 유산으로 인해 1960년대 초까지도 근대적 지향을 실현하는 내적인 동력은 부정된다. 1960년대를 거치며 식민사학을 극복하고 한국사의 내재적·주체적 발전 가능성을 발견하려는 시도가 역사학계의 주류적인 흐름으로 자리잡고 난 이후에야, 전근대의 체제를 해체하는 움직임과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동력이 그려진다. 이기백의 『한국사신론』은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내재적 발전론에서는 ‘빈곤’과 ‘발전’을 상충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조선사회정체성론과 인식틀을 공유하였기에, ‘분화’와 ‘발전’을 강조하는 서술은 자연히 ‘빈곤’ 서술 축소로 이어졌다.

한편, 1980년대에는 급진적이고 총체적인 변혁을 지향하던 지식인들에 의해 ‘민중’을 중심으로 한 역사서술이 시도되고 민중사학이 형성된다. 민중사학은 분단 이후 단절되었던 일제 식민지기 유물사관을 복원하는 한편, 내재적 발전론의 시각에서 제시된 연구성과를 비판적으로 변용하여 수용한다. 이들은 빈곤의 원인으로 계급의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사회제도의 자율적인 공간을 제시하여 이전 시기의 연구성과를 끌어안았다. 또한 ‘빈곤’을 정체성과 후진성으로 파악하는 논리 자체를 부정하면서 ‘대중적 빈곤’이라는 객관적 조건이 역사주체로서 ‘민중’이 성장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로써 민중사학은 역사에 대한 발전적 인식 속에 ‘빈곤’ 문제를 깊숙이 끌어들었다.

오늘날 역사서술과 ‘빈곤’의 관계는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이후 민중사학은 빠르게 소멸되기 시작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민중사학을 넘어선 민중사’, ‘민중운동사 이후의 민중사’와 같이 민중사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상을 구성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⁶⁴⁾ 나아가 역사주체를 단위로 역사의 발전상을 일관되게 그려내려는 근대 역사학의 거대역사(History)가 근

본적인 성찰의 대상이 되면서,⁶⁵⁾ 통사의 구성 및 체제와 더불어 이를 구성하는 주요 개념들 또한 비판적 성찰과 재구성의 범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빈곤’이라는 주제는, 때로는 근대를 향한 발전의 서사와 결합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과 길항하기도 했던 영역을 보여주었다. ‘진보’, ‘발전’, ‘근대’, ‘민족’, ‘국가’, ‘혁명’ 등 근대 역사학에서 구사하는 주요 개념이 통사에서 특정한 지향점을 노정하는 것과는 달리, ‘빈곤’은 그 자체로 ‘근대로의 길’을 향한 특정한 방향성을 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역사의 진전을 통해 궁극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과거-현재’의 부정적인 경험세계에 놓여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통사서의 주된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발전주의적인 서사를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는 비판적인 입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4) 허영란(2013), 「민중운동사 이후의 민중사 — 민중사 연구의 현재와 새로운 모색」; 이용기(2013), 「민중사학을 넘어선 민중사를 향하여」, 역사문제연구소 민중사반편, 『민중사를 다시 말한다』, 역사비평사.

65) 나인호(2011), 『개념사란 무엇인가 — 역사와 언어의 새로운 만남』, 역사비평사, pp. 162-164.

참고문헌

【자 료】

『三國史記』.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백남운(1937), 하일식 역(1993b), 『조선봉건사회경제사』(上) 2, 이론과 실천.

_____(1933), 심우성 역(2004), 『조선사회경제사』, 동문선.

신채호(1931), 박기봉 역(2006), 『조선상고사』, 비봉출판사.

이기백(1976), 『한국사신론』, 一潮閣.

_____(1967), 『한국사신론』, 一潮閣.

_____(1961), 『國史新論』, 泰成社.

이병도(1952), 『國史大觀』, 白映社.

최록동, 『현대신어석의』, 한림과학원 편, 『한국근대신어사전』, 선인.

한국민중사연구회(1987a), 『한국민중사』 I, 풀빛.

_____(1987b), 『한국민중사』 II, 풀빛.

한국역사연구회(1992), 『한국역사』, 역사비평사.

_____(1989), 『한국사강의』, 한올아카데미.

황의돈(1923), 『新編朝鮮歷史』, 이문당.

【논 저】

다나카 다쿠지(2006), 『빈곤과 공화국 — 사회적 연대의 탄생』, 문학동네.

김윤희(2016), 「1894~1919년 근대빈민구제담론의 구조와 허구성」, 『한국사학보』 64, 고려사학회.

_____(2015), 「1920년대 경성부 사회사업과 빈민·주택조사의 정치성」, 『사림』 54, 수선사학회.

김정인(2010), 「내재적 발전론과 민족주의」, 『역사와 현실』 77.

나인호(2011), 『개념사란 무엇인가 — 역사와 언어의 새로운 만남』, 역사비평사.

노용필(2009), 「이기백 『국사신론』·『한국사신론』의 체제와 저술 목표(下)」, 『한국사학사학보』 20.

도면희(2013), 「한국에서 근대적 역사 개념의 탄생」, 이신철 편, 『동아시아 근

- 대 역사학과 한국의 역사인식』.
- 도면희(2009), 「국사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 한국 근대역사학의 창출과 통사체계의 확립」, 도면희·윤해동 편, 『역사학의 세기 — 20세기 한국과 일본의 역사학』, 휴머니스트.
- 박종린(2014), 「‘조선사’의 서술과 역사지식 대중화 — 황의돈의 『중등조선역사』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31.
- 방기중(1986), 「조선 후기 수취 제도 · 민란 연구의 현황과 ‘국사’ 교과서의 서술」, 『역사교육』 39.
- 박찬승(1994), 「신채호」, 조동걸·한영우·박찬승 편,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下, 창작과 비평사.
- _____(1993), 「한국 사회주의사상사 연구의 초석농기: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 방기중, 역사비평사, 1992」, 『역사비평』 20.
- 배성준(2010), 「1980~90년대 민중사학의 형성과 소멸」, 『역사문제연구』 23.
- 신주백(2014), 「관점과 태도로서 ‘내재적 발전’의 분화와 민중적 민족주의 역사학의 등장 — 민중의 재인식과 분단의 발견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 심승구(1994), 「황의돈」, 조동걸·한영우·박찬승 편,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下, 창작과 비평사.
- 예지숙(2017), 『조선총독부 사회사업정책의 전개와 성격(1920년~1936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병희(1994), 「미완의 조선봉건사회론: 『朝鮮封建社會經濟史(上)』(白南雲 改造社 1937)」, 『역사와 현실』 12.
- 이신철(2013), 「『동국사략』(현재)의 당대사 역술과 서술을 통해 본 한국 근대 역사학의 ‘국민 만들기」, 이신철 편저, 《동아시아 근대 역사학과 한국의 역사인식》, 선인.
- 이용기(2013), 「민중사학을 넘어선 민중사를 향하여」, 역사문제연구소 민중사반 편, 『민중사를 다시 말한다』, 역사비평사.
- 정병준(2016), 「식민지 관계 역사학과 근대 학문으로서의 한국역사학의 태동」, 『사회와 역사』 제110집.
- 정진영(1998),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 조경희, (2016), 「1920년대 식민지조선 사회사업의 성격과 그 한계 — ‘방빈(防貧)’의 좌절에서 노동사업으로」, 『역사와 담론』 80, 호서사학회.
- 조동걸(1994), 「민족국가 건설운동기의 역사인식」, 조동걸·한영우·박찬승

편,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下, 창작과 비평사.
허영란(2013), 「민중운동사 이후의 민중사 — 민중사 연구의 현재와 새로운 모색」, 역사문제연구소 민중사반 편, 『민중사를 다시 말한다』, 역사비평사.

원고 접수일: 2018년 1월 12일

심사 완료일: 2018년 2월 1일

계재 확정일: 2018년 2월 1일

ABSTRACT

The Perception of ‘Poverty’ in Modern History Books:
Focusing on Writings about the Pre-modern Period

Lim, Da-Eun*

In modern society, the concept of ‘poverty’ features importantly in the social discourse. The dramatic socioeconomic changes, transitions in governmentality, and the birth of political thoughts pursuing liberty and equality contributed to the introduction of newly perceived ‘poverty’. The discourse on ‘poverty’ in historical texts reflected such intensive changes.

Although historical texts published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y Korea contained modern historical conventions and lenses, the citation of pre-modern historical texts extended the Confucian ideology regarding the discourse of poverty. Baek Nam-Woon is the first to discuss the problem of ‘poverty’ as a social problem in history writing. Baek prescribed class as the fundamental cause of ‘poverty’ and expected that elimination of class would bring in a shift in social formation and dissolve ‘poverty.’

However, the liberation and division in Korea severed such traditions of historical materialism in South Korea, and opened the doors for Lee Ki-Baik’s perception on the cause of ‘poverty’ — that the pre-modern status system and tax policy had caused ‘poverty.’ On one hand, under the

*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influence of the colonial historiography, historians recognized the contradictions between poverty and development, and conventionalized the narrative that the intensification of poverty in the late Chosun period deterred the autonomous modernization in Korea. However, historians in the 1960s searched for traces of internal development in Korea, and, in turn, disclaimed the severity of poverty in the late Chosun period.

Post-1980s historians formed the history of the Minjung by inheriting the traditions of historical materialism and critically accepting the results of internal development. While these historians propose the problem of class as the cause of ‘poverty,’ they offer a more expansive view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ass and social institutions. Furthermore, the post-1980s historians suggest new possibilities of autonomous development in Korean history in expanding the narrative on ‘poverty’ and point to the problem of ‘poverty’ as the objective condition for the development of ‘Minjung’, the principle agent of reform.

